

1992년 2월 27일 제123회 중의원 문교위원회

○ 일시: 1992년 2월 27일(목) 오전 10시 개의

○ 발언자:

- 하토야마 구니오(鳩山邦夫) 국무대신(정치가, 민주당 소속 중의원 의원, 중의원 문교위원장, 문부대신, 노동대신, 중의원 운영위원장, 법무대신, 총무대신,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지방분권개혁), 민주당 부대표, 재판관소추위원회 위원장, 중의원 지방창생에 관한 특별위원장)
- 고시이시 아즈마(興石東) 의원(정치가, 일본사회당 소속 중의원·참의원 의원, 참의원 국토교통위원장·부의장, 민주당 간사장·대표대행)
- 사카모토 히로나오(坂元弘直) 정부위원(문부성 초·중·고등교육국장, 문부사무차관, 국립박물관 이사장 등)

○ URL: <https://kokkai.ndl.go.jp/#/detail?minId=112305077X00219920227&spkNum=109¤t=41>

○ 해제(개요 및 특징)

교과서 문제를 둘러싼 질의응답 과정에서 중군위안부 기술 문제가 강제연행과 더불어 하나의 예로 띄엄띄엄 거론됨. 하토야마 대신은 지난번처럼 일본 내 출판사 한 곳만 이를 다루고 있음을 다시 언급함. 참고로 사카모토 정부위원은 중군위안부에 대해 현재 한국의 교과서는 전혀 기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감수성이 예민한 아동과 학생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 것이라는 게 한국 문교부의 설명이라고 언급함.

○ 주요 내용 번역

- ▷ **고시이시 위원** “(전략) 저는 때로는 정치문제나 외교문제로 발전하는, 어린이들이 매일 사용하는 교과서에 대한 문제로 좁혀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특히 역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여러 차례 논의되었고 정치적 과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역사교육을 둘러싼 교과서 문제의 배경,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과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예정인지 먼저 대신에게 여쭙어보고 싶습니다.”
- ▷ **하토야마 국무대신** “(전략) 일반적으로 일본의 역사교과서는 너무 제멋대로 쓰여 있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비판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등의 문제에서도 창씨개명에서부터 강제연행, 그리고 **중군위안부** 문제도 한 출판사가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서 다루고 있고, 꽤 다양한 교과서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역사교과서의 숙명으로서, 앞으로 국회에서

의 논의도, 국제적인 논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역사교과서에 따르는 숙명 같은 것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현재 꽤 좋은 교과서가 만들어져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 ▷ **고시이시 위원** “국장님의 정중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포인트가 되는, 문제시되는 대목이 있는 역사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저는 정확히 1982년 고교 일본사 문제를 둘러싸고 외교문제가 되어, 그 기술을 수정하기 위한 교과서 검정기준도 개정해야 했고, 그리고 추가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역사가 반복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예감이 드는 문제는 역시 오늘날의 한국·중국과의 외교문제입니다. 좀 전에 대신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중군위안부** 문제 및 강제연행 문제로 10년 후인 오늘, 또 다시 같은 상황에서 중국과 한국 쪽에서 일본 교과서에 그 문제를 기술하여 역사적 사실로 넣는 것이 어떠한가, 넣어 달라, 이러한 요구도 있었고, 미야자와 수상도 서울에서, 첫 외국 유세가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중략)

- ▷ **하토야마 국무대신** “그것은 전적으로 말씀하신 대로라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일련의 사례를 들면, 국제사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면 **중군위안부** 문제에서, 이미 한 출판사는 ‘고교 일본사’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중군위안부**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는 문제는 다소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특히 사안이 사안인지라 성인 사회에서 크게 논의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만, 교과서에 적당한 내용인가라는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군위안부 문제가** 여기저기서 말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과 일본뿐만이 아니라 더 확장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지금 국제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을 보고, 교과서의 발행자나 집필자가 어떤 원고를 쓸지 결정하는 것이겠지요. 문부성이 이렇게 쓰라 저렇게 쓰라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국정교과서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문부성은 ‘누가 이렇게 말했으니, 교과서를 이렇게 쓰라’는 방식을 절대 취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는 발행자와 집필자가 협의하여 이런 것도 화제가 되고 있으니 써넣어서 만들어진 교과서를 검정할 뿐입니다.”

(중략)

- ▷ **고시이시 위원** “(전략) 그리고 **위안부** 문제나 강제연행 문제가 외교문제로 나왔을 때 교과서에 기술할지 말지, 그렇다면 어디에 어떠한 형태로 할 것인지에 관한 과제가 어찌면 머지않아 찾아올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중략)

- ▷ **고시이시 위원** “(전략) 시간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교과서 문제가 어떤 때는 외교문제가 되고, 어떤 때는 정치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교육에 대한 정치적 개입도 우려되는 문제로까지 파생될 요소가 있는 **위안부** 문제나 강제연행 문제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민간에서는 일한 간에 교과서를 공동 연구하여 교과서를 만들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독일과 폴란드 합동위원회 사례도 있습니다. 향후 그러한 문제에 대해 문부성이 교과서 문제를 국제적으로 함께 고민할 생각은 있는지, 없다면 그것은 어떤 이유이고 있다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 **하토야마 국무대신** “국정교과서 제도를 채택한다면 국가가 결정하고 국가가 교과서를 만들어 배부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정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 상당히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역사는 국정교과서로 하고 있지요, 어떤가요, 아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주제여서 그런 건 아니지만, 역사교육과 결부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에서 뜻 맞는 사람들끼리 어떤 교과서가 이상적인가를 함께 연구하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일입니다. 다만 국정교과서가 아닌 우리로서는, 예를 들면 문부성이 어느 나라와 어떤 교과서가 좋은지를 협의한다는 것은 너무 이상합니다. 우리나라의 검정제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듯이 민간에서 자유롭게 집필하여 그것이 얼마나 ‘학습지도요령’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를 검정하고 이것을 채택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구조와 일본 정부가 나서서 더 좋은 교과서에 대해 협의한다는 것은 익숙하지 않다는 관점을 저는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는 반드시 민간끼리 중요하게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견해입니다.”

(중략)

- ▷ **사카모토 정부위원** “(전략) 이번 한국과의 문제에서 하나의 사례인 **중군위안부** 문제입니다만, **중군위안부**에 관해 한국의 교과서에는 전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의 문부성, 즉 문교부는 왜 쓰지 않느냐는 현지 신문기자의 질문에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 대한 영향 등도 고려했다는 것을 하나의 이유로 꼽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중군위안부**에 관해 서술한다고 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일본정부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건의하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과서 중 한 종류가 그러한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부터 고등학교의 검정이 시작되고 한국과의 관계에서 이 정도로 문제가 된 사항이라서 집필자가 어떻게 대응할지, 저희로서는 종래에 그러한 검정을 한 예가 있으므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